



김치 담그는 온누리안 새댁들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2007광주김치축제가 17일 오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치는 문화다'라는 주제로 개막했다.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사랑나눔김치담그기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들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경기 끝없는 추락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청약제로 속출
5년새 217곳 부도...경제회복 발목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주축인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면서 그 여파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건설업체 줄부도와 미분양 폭증 등에 이어 최근에는 '청약 제도' 아파트가 속출할 만큼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 내 생산과 소비활동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소속 이진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 이후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217개에 달한다. 또 이들 업체의 부도로 인해 3천287명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돼 지역 건설경기 침체의 정도를 실감케 하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은 한국은행의 '9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은 0.19%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신규 부도업체 수는 10개로 전 달(8개)보다 되레 늘었다. 한 달새 4곳의 건설업체가 부도로 인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는 주택시장 침

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는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에 육박하는 데다 이달 들어선 남구와 북구에서 '신시공 후분양'에 나선 건설업체 2곳의 청약률이 잇따라 '0'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광주는 또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회복이 타 시·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백화점 3곳의 가을 바겐세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추석이 풀린 상품권이 상당 부분 회수됐기 때문으로, 같은 기간 투자된 수 증가율을 기록한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출 증가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광주는 경기회복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의류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를 비롯한 음식·숙박업소 등도 장기적인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업소는 제88회 광주 전국

체육대회 개최로 인해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대회 폐막 이후 손님들의 발걸음이 뜰 끊기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광산구 신가동이나 산월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가게를 연 일부 음식점들의 경우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을 포기한 채 이전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인근 단지의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워 만큼 심각한 영업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또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가 하면 목욕탕·세차장 이용마저 예년보다 10%가량 줄어드는 등 광주지역 경기 침체 확산 현상이 전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호남 광주·전남도회장은 "광주의 경제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시장 지원 대책이나 규제완화조치 등이 하루 빨리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 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공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 문의 : 10621220-0541

“鄭 주가조작 의혹” “李 증인석 나와라” ‘검증 국감’ 첫날부터 파행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시작된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이명박, 정동영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정면 충돌, 파행이 거듭됐다. <관련기사 3면>
대통합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 BBK 주가조작 의혹, 삼암 DMC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공세를 펼쳤으며 한나라당은 정동영 후보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섰다.
17일 국회 정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 예리카 김 등에 대한 대통합신당 측의 증인 채택 강행 문제와 관련, 박병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위원장직을 접거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이날 내내 파행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를 놓고 양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를 선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환경부 국감이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우호 정책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통합신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 증인 채택 논의를 위한 의사 일정 변경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정동영 후보가 처남의 코스닥기업 주가조작 의혹 과정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펴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통일의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국방위 국감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대통합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거래 및 증여세 포탈 의혹,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의 친인척인 이상은, 김재정 씨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14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상임위원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남·수도권에 SOC 편중

전체의 60% 차지...호남 17% 영남의 절반

국내 도로·항만·공항·상하수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의 60% 가량이 영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의 SOC는 영남권의 절반에 불과했다.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이 배포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영남권의 SOC 총액은 155조7천억원으로 국내 전체 SOC 총액 515조 2천억원의 30.2%를 차지했다. 이어 수도권은 150조원으로 전체의 29.1%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SOC가 60%를 넘었다.
반면 광주, 전·남북 등 호남권의 SOC는 89조5천억원에 불과, 전체의 17.4%에 머물렀으며 충청권은 75조5천억원(14.7%), 강원권은 37조9천억원, 제주권은 6조6천억원이었다.

또 호남권의 SOC 중 도로 총액은 46조1천억원, 철도는 7조5천억원, 공항은 4천억원, 항만은 4조8천억원, 상하수도는 5조3천억원인 반면, 영남권은 도로 88조3천억원, 철도 20조1천억원, 공항 7천억원, 항만 7조3천억원, 상하수도 10조8천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남권의 SOC는 영남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지역개발 전문가 등의 SOC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실시한 16개 시·도 공무원, 지역발전 연구소 연구원,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SOC 구비 정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광주지역은 36.4%, 전남지역은 50.0%가 '매우 부족하

다'고 답했다. SOC 부족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광역시중 광주시가 가장 높았으며, 전남도는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서울·대구·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SOC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한 경우가 한 명도 없었으며, 부산은 6.7%, 대전 10.5%, 충북 16.7%, 전북 18.2%, 경남 16.7%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SOC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innisfree